

무엇을 보수할 것인가?*

What is to be Conserved?

임수환 _국가안보전략연구원

Lim, Su Hwan _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권용립 교수가 지은 『보수』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한국개념사 총서 제10권으로 금년 4월에 나온 책이다. 이 책은, 보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보수주의 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쓴 보수에 대한 기성 저술들과 달리, 19세기 서구에서 정치적 개념으로 등장한 보수가 한국인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수에 대하여 언변을 구사하는 수많은 식자들의 글을 찾아내기 위해 저자는 신문과 사서들에 실린 짧은 글들을 무수히 읽고 갈무리한 후 글 속에 인용할 뿐 아니라 특정한 용례가 되풀이되는 빈도를 측정하기도 했다. 정치적 권위와 대중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개념으로서의 보수를 파악하기 위해 저자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을 제하고도 개항이후 130년에 걸친 신문자료들을 뒤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보수의 기원과 전개」라는 제하의 첫째 파트에서는 관습과 전통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일상용어로부터 정치적 개념으로 분리된 보수라는 말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변혁에 대한 우려에서 기원되었다는 점이 부각된다.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절대주의 왕정을 무너뜨린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가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준 것은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자연권

* 권용립, 『보수: 개념의 역사』(소화: 2015)에 대한 서평.

사상이었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역사적 진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계몽주의 사상의 계보는 서구역사에서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어졌다.

저자는 서구 보수주의 이론의 시원으로 꼽히는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대혁명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프랑스대혁명의 과격한 급진성이 빚어낸 파국이 인간 이성에 대한 극단적 맹신과 이성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은 뛰어난 몇몇 천재의 이성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통 인간이 긴 세월에 걸쳐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의 힘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문명의 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 비전이 아니라 현실사회의 실질적인 안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전통, 관습과 안정 등이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를 특징짓는 언어들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보수라는 단어가 서구의 정치를 소개하는데 필요한 번역어로 수입된 후 정치적·사회적 개념으로 정착하는데 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한국에서만 “재야운동권이 1980년대 말 급진적 통일론을 내세워 진보로 분화해” 나간 후 “보수가 진보의 대척 개념으로 대두하여 정치적·사회적 변동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었다고 분석된다(97, 105). 한국의 지배층이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프랑스대혁명에 비견할 만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

두 번째 파트 「근대 한국의 보수 개념」과 세 번째 파트 「현대 한국의 보수 개념」을 읽는 독자는 1980년대 말 보수/진보의 두 진영으로 대별되는 정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보수와 수구라는 단어의 용례가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일반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파트는 특히 우리나라의 사서와 신문에 실린 글들을 소개하며 보수라는 개념의 용례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여 왔으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어서 읽는 사람들 각자의 사고를 자극해 주고 있다.

책에 제시된 용례들은 개항 이전까지 보수는 ‘지금 있는 것’을 보전하고 지킨다는 뜻의 동사로 수구는 ‘예부터 내려오는 제도와 인습을 따르다’는 말로 쓰여

왔다는 것과 개항 이후에 주로 외국의 정치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수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책 135쪽에 소개된 1909년 11월 17일자 황성신문 논설은 “영국은 보수주의가 강해서 2천 년 역사의 규율과 모습을 지금까지 준수하되 이를 토대로 해서 시대가 변하면 맞게 고쳐서 진보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하고 “프랑스 국민은 그 파괴의 행동이 심히 극렬했던 탓에 지금까지 큰 피해를 입은 영향이 있다 하겠다”라고 평가하여, 보수 개념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한 파악이 오늘날의 수준에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게다가 이 논지는 영국과 프랑스가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저자는 당시 온건개혁파 지식인들이 “무조건 서구문물을 수입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보자는 경박한 진보를 배격하면서 영국식의 ‘온건한 보수와 신중한 개진’을 최상의 구국 방책으로 여겼다”고 분석하고 있다(136).

대한제국 시대의 온건개혁파 지식인들은 서구의 정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파악하게 되었지만 대한제국은 정치적 근대화를 실현하지 못한 채 식민화되었다. 일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위정척사를 내세우는 유학자들로부터 신학문을 익힌 혁명가들로 세대교체 되는 가운데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노선을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항일운동가 집단 속에 좌우 분열이 시작되었다.

“1920년대 초부터 국내로 들어온 좌파 담론에서는 보수가 반노동자본을 뜻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164). 일제 강점기 지하에서만 유포되던 좌파의 계급투쟁 담론은 해방 직후 남로당의 공개활동으로 정치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 미군이 진주하기 직전 인민공화국이 선언되자 계급투쟁 노선에 반대하는 우파의 지도자들이 한민당을 결성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지지하게 되었다. 이어서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반탁 대중운동을 벌이게 되자 좌우의 대립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두 개의 국가건설로 치닫는다. 저자는 보수 개념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한다: “좌익이 우익을 겨냥해서 쓴 ‘반동·파쇼’와 우익이 좌익을 겨냥해 쓴 ‘반역·매국’과 같은 선동적 수사만 난무했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 같은 점잖은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이다(173).”

저자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건국이후 완화되어 1950년대 중반에 오면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조짐을 보였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윤제술과 김영선이 1956년 동아일보와 사상계에 실은 글들을 발췌소개하고 있다. 윤제술은 “보수주의는 착실한 개혁이요 ‘동의를 의한 혁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김영선은 “현상 타파 내지 개혁을 주장하는 보수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한다(208-209).

이런 변화의 조짐에 대하여 저자는 “반공과 파쇼라는 말이 자취를 감추면서 좌/우 구도가 보수/혁신 구도로 바뀌었다. 개화 이후 70년 만에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 담론의 중원을 차지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기회의 창은 조봉암이 사형당한 진보당사건과 5·16군사정변을 거치면서 닫히고 마는데, 책에는 “반공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진보와 혁신을 표방한 정치 세력은 잠적하거나 소멸”했다고 기술되었다(202).

보수에 관한 저자의 이야기는 5·16 군사정변 이후 진보부재의 시대로 이어진다. “서구식 사회주의 정당이 현실적으로 좌경할 우려”가 있다고 한 이석제 법사위원장의 1962년 언명에 대하여 저자는 “좌와 우의 적대적인 체제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는 그동안 ‘혁신’으로 분류되어 온 서구식 사민주의를 소련 및 북한의 공산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반공체제하에서 보수의 단색 정치만 허용될 것이라는 선언이었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보수라는 정치적 개념이 프랑스대혁명과 불가분의 관계 위에 생겨났던 역사적 맥락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은 진보와 혁신의 담론을 금지시킨 결과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보수도 사라져 버린다는 1961년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961년 체제하에서도 1963년 민정이양 이후 보통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이해하는 이유의 큰 부분을 보수/진보의 정치적 담론이 사라졌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의 본령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말로 비자유주의적 정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정치는 단지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존했을 뿐 아니라 국가주도적으로 근대화 사업을 추진

하여 그 존재이유로 삼았다. 저자는 권위주의적 발전 시대에 변형된 보수/진보 개념을 “일상적 삶의 서구화를 진보와 근대화로 인식한 이 시대에는 보수가 자연스럽게 음울 퇴영을 은유하는 말이 되었다”고 표현한다.

저자는 권위주의 시대에 사라졌던 보수/진보 담론이 한국정치가 1980년대 말에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을 제10장 「민주화 탈냉전의 시대: 1987년 이후」에서 자세히 추적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반대와 1969년 삼선개헌 항의로 이어지던 학생운동의 맥락에 1970년 전태일 분신사건이 더해진 후 1971년 4월 종교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를 망라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반체제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결성된 반체제 운동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1980년대 초부터는 반미주의와 주체사상이 운동권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과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기폭제가 되면서 “반정부운동의 주도권이 민족해방계열로 넘어갔다(240)” “이들의 궁극 목표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었지만, 야당의 궁극 목표는 군사독재의 청산과 집권이었다...1980년대는 보수와 진보의 오월동주시대였다(241).”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위해 연대했던 두 세력은 권위주의 권력이 무너진 1987년 이후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게 된다. “재야운동권의 궁극적 목표는 반독재와 민주화를 넘어 ‘민중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지만, 보수야당의 목표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보수가 혁신과 공존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이었다(248-249).”

1990년 원내정당들 중 평민당을 제외한 3당이 합당하여 보수대연합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1980년대의 민주화 연대를 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로 분열시킨 정치적 기폭제”로 작용했는데(250), “199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진보가 한국의 정치적 담론에서 보수의 주된 대척 개념으로 자리를 잡는다(258-259).” 이때 새롭게 등장한 진보는 반미·자주와 반미·친북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1950년대 진보당이나 그 이후의 혁신계 정당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진보는 “대미 종속 탈피, 반미·자주, 미군 철수” 등의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였다(270). 이들은 민족주의라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배타적 통일정책을 도출해 내고 있는데, 이 순수논리는 군사력의 독점권을 주장하는 두 국가가 한반도 위에서 경쟁하고 있고 남한의 경제적 번영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구체적 처방의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 맹신이라기보다 낭만주의적이라고 해야 할 진보의 위험한 질주 앞에 선 보수세력은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수구 이미지와 결별하고 1996년 4·11총선 과정에서 원조보수 논쟁을 벌이며 보수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이념으로 복권시키려는 노력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보수를 복권시키려는 노력은 2000년 6월 15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보는“평화, 통일, 민족, 남북 대화를 표상하는 말”로 수구와 보수는 “냉전, 반통일, 친미, 남북 대결을 표상하는 개념”으로 굳어지는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했다(299). 1961년 체제의 긴 기간에 걸쳐 서구화와 경제발전이 진보로 인식되는 동안 보수는 봉건적 완고성이나 구태의연한 삶의 태도를 뜻하는 말로 고착되었고, 반권위주의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 초기의 정치담론을 지배한 진보세력이 보수와 수구에 대한 규정을 주도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가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담론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에서 저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가 진보와 함께 한국 정치의 현장 담론을 장악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식개념이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을 밟으면서 형성된 서구 정당정치의 보수 개념과 달리, 현대 한국의 보수 개념은...변혁운동의 담론과 대중적 매스미디어가 주도한 진보와 보수의 수사전쟁 속에서 급조”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309). 그는 맺음말 첫 머리에 “잊어버리고 싶은 정치적 기억들로 짐스럽다면 ‘보수’라는 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한 뒤 오늘날 한국의 보수/진보 경쟁이 현실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과거의 잣대, 명분론, 도덕성 심판 등 비현실적 경쟁에 몰두하는 실정을 개탄한다.

저자는 또 “개화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정치적 개념으로 함께 수용될 싹이 잠시 보였지만, 일제의 강점으로 밝혀 버렸다”고 아쉬워한다. 저자는 9장 첫머리에서 1950년대 중반에도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담론이 형성되는 조짐을 관찰

한 바 있는데, 맺음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필자는 개화기 지식인들의 깨어난 정치의식이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해진 후 다시 1950년대 중반의 발전적 조짐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지식인들이 개화기에 이미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나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 되자 해외로 나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 2조에서 민주공화제와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3, 4조에서 인민의 평등과 자유권을 규정하는 한편으로 7조에서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을 8조에서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1조에서 4조까지 자유주의적 진보성을 보이면서도 7, 8조에서 신의 의사를 언급하여 이성의 남용을 경계하고 황실 우대를 통하여 수천년 국가전통을 계승하는 보수적 고려를 잊지 않고 있다. 임시헌장의 내용에는 프랑스대혁명을 추동했던 자유주의 사상과 이성의 남용에 대한 경계심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1921년에는 상해 임시정부 내의 좌파가 고려공산당을 결성했다(147).” 소련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노선을 추종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나타나 계급투쟁을 통하여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제도를 타파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신질서를 건설할 목표로 활동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계몽주의적 전통을 이어 과학적 역사발전의 법칙에 따라 새 세상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전통적 가정, 교회와 국가 제도를 파괴하면서 국가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소련군 점령 하 38도선 이북지역에 들어선 북한 노동당은 기독교 교회 및 민주당을 거세하고 토지개혁을 통해 사유재산제를 무너뜨린 후 계급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를 건설했다.

1948년 5월의 보통선거로 남한지역에서 선출된 의회가 제정한 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기미년 임시헌장에 규정된 민주공화제라는 자유주의적 제도를 고수하는 동시에 역사와 전통이 공동체의 정체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립된 대한민국 행정부와 의회에는 이승만, 이시영, 이범석, 신익희 등의 임시정부 지도자들, 그들을 지지하던 독립촉성국민회와 한민당이 주동적으로

참여하여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토지개혁법에서는 위토와 사찰토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보존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유교적 가족과 종교제도의 파괴를 방지했다.

북한 노동당이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추종하며 북한에서 가정, 교회와 국가전통을 파괴하는 혁명을 추구한 것과 대한민국의 건설자들이 근대화 혁명과정에서도 가정, 종교와 국가제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비교할 때, 남북한 건설자들이 보인 정치노선의 차이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서구전통의 정치적 개념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분단 이후 전쟁기간에 걸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교회와 국가제도의 파괴를 피하여 월남했다. 한국사회에는 지켜야 할 가정, 종교와 국가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의 존재이유가 있었고 대중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근대화가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의 존재이유도 주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좌와 우 또는 진보와 보수의 노선이 국가 내에서 대립하지 않고 두 개의 국가로 분립되어 6·25전쟁을 벌인 부담 때문에 보수/진보의 담론이 자유롭게 발전하기 어려웠다고 이해할 수 있다. 1956년 진보당 사건에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이후에는 진보와 혁신의 담론이 사라지는 긴 권위주의 시대를 겪었지만 4·19혁명의 자유정신은 학생시위와 시민운동으로 계승되어 1987년의 민주화를 결과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현대사의 기억들을 짐스러워하고 망각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근현대사가 특별히 파행적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아직 현대사를 소화할 수 있는 이론적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서유럽, 북미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정복, 식민화, 인종학대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지켜야 할 가치를 분별하는 보수주의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 분단과 전쟁, 독재와 저항으로 이어진 우리 근현대사의 그늘진 기억들” 속에서도 독립투쟁과 건국정신이 있었고 관료주의적 근대화에 저항하는 자유정신이 이어졌다는 긍정적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보수가 진보의 과격성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을까? 권용립 교수는 이 책에서 “어설픈” 보수/진보의 정치적 담론이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상세히 예시해 줌으로 해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정치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